

|       |            |
|-------|------------|
| 의안번호  | 2207162    |
| 의 퇴 인 | 김예지의원      |
| 회 답 일 | 2024.2.11. |
| 추계번호  | 24D6458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의 진정 조사대상을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인권으로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06억 4,500만원, 2030년 112억 7,2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541억 3,100만원(연평균 108억 2,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 계    | 연평균    |
|---------------------------|--------|--------|--------|--------|--------|--------|--------|
| 진정 조사대상 확대<br>(안 제30조제1항) | 10,645 | 10,477 | 10,733 | 11,004 | 11,272 | 54,131 | 10,826 |

주: 1. 진정 조사대상 확대(안 제30조제1항)는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여 추계  
 2. 개정안에 따라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82명(국가인권위원회 자료)의 공무원을 증원하고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I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30조제1항<br>(위원회의 조사대상) |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음 | 재량규정 |

##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연번 | 조·항(조제목)                 | 추계여부 |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
| 1  | 안 제30조제1항<br>(위원회의 조사대상) | ○    | -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의 진정 조사대상에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인권위의 진정 업무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공무원 증원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개정안에 따라 82명(인권위 자료)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데에 소요되는 보수, 기본경비,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 사무실 임차료를 추계함
  - 인권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업무는 인권침해행위의 조사·구제, 인권침해행위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 인권상담·민원, 인권교육 등
  - 이에 인권위에서는 1국(가칭 사회권증진국) 6과를 신설하고 기존 조직(인권상담조정센터 등)의 확대가 필요하여 총 82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sup>1)</sup>
-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인권위 소속 82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보수, 기본경비,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 사무실 임차료로 한정하여 추계
- 본 추계에서는 직급별 인원에 직급별 보수를 곱하여 총 보수를 산출한 후, 기본경비 비율, 기관부담금 요율, 1인당 자산취득비, 1인당 임차료 등을 을 활용하여 각 비용을 산출
  - (보수) 2026년 63억 2,200만원, 2030년 69억 5,200만원으로 추정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

|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
| 소비자물가상승률(CPI) | 3.6% | 2.5% | 2.1% | 2.0% | 2.0% | 2.0% | 2.0%  |

- (인원) 3급 이상 2명, 4급 11명, 5급 21명, 6급 30명, 7급 18명 등 총 82명<sup>2)</sup>
- (1인당 보수) 2024년 기준 직급별 보수에 추계기간 동안 공무원 보수 상승률<sup>3)</sup> 적용
- (기본경비) 2026년 29억 4,600만원, 2030년 32억 4,000만원으로 추정
  - 인권의위 2024년 기준 기본경비 비율은 46.6%이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
- (기관부담금) 2026년 8억 2,800만원, 2030년 9억 3,200만원으로 추정
  - 기관부담금 요율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값 적용<sup>4)</sup>
- (자산취득비) 2026년 4억 1,100만원
  - 자산취득비는 2026년에만 발생하며 총 인원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501만원<sup>5)</sup>을 곱하여 산출

[표 2] 공무원 증원에 따른 보수 등 추정: 2026~2030년

(단위: 원, 백만원)

| 구분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1인당<br>보수       | 3급      | 134,985,879 | 138,225,540 | 141,542,953 | 144,939,983 | 148,418,543 |
|                 | 4급      | 106,347,945 | 108,900,296 | 111,513,903 | 114,190,236 | 116,930,802 |
|                 | 5급      | 88,354,598  | 90,475,108  | 92,646,511  | 94,870,027  | 97,146,908  |
|                 | 6급      | 67,332,621  | 68,948,604  | 70,603,371  | 72,297,852  | 74,033,000  |
|                 | 7급      | 55,964,732  | 57,307,886  | 58,683,275  | 60,091,673  | 61,533,874  |
| 보수              | 3급(2명)  | 270         | 276         | 283         | 290         | 297         |
|                 | 4급(11명) | 1,170       | 1,198       | 1,227       | 1,256       | 1,286       |
|                 | 5급(21명) | 1,855       | 1,900       | 1,946       | 1,992       | 2,040       |
|                 | 6급(30명) | 2,020       | 2,068       | 2,118       | 2,169       | 2,221       |
|                 | 7급(18명) | 1,007       | 1,032       | 1,056       | 1,082       | 1,108       |
|                 | 소계(82명) | 6,322       | 6,474       | 6,630       | 6,789       | 6,952       |
| 기본경비(=보수×46.6%) |         | 2,946       | 3,017       | 3,090       | 3,164       | 3,240       |
| 기관부담금(=보수×요율)   |         | 828         | 848         | 875         | 903         | 932         |
| 자산취득비           |         | 411         | -           | -           |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에는 3~4급, 4~5급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상위 직급으로 가정하여 추계

3) 2025년 3%, 2026년 이후는 2023~2025년 평균 상승률 2.4%를 적용

4) 2026년 13.1%, 2027년 13.1%, 2028년 13.2%, 2029년 13.3%, 2030년 13.4%

5)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결과, 2020년 기준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는 4,197,000원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1인당 자산취득비 산출

- (사무실 임차료) 2026년 1억 3,800만원, 2030년 1억 4,800만원으로 추정
  - 사무실 임차료는 공무원 정원, 1인당 월평균환산임대료(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포함), 임차기간을 곱하여 산출
  - 1인당 월평균환산임대료는 2023년 기준 13만원<sup>6)</sup>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 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3] 사무실 임차료 추정: 2026~2030년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
| 1인당 월평균환산임대료<br>(a, 만원)       | 14   | 14   | 14   | 15   | 15   |
| 사무실 임차료<br>(=a×82명×12개월, 백만원) | 138  | 138  | 138  | 148  | 148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진정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06억 4,500만원, 2030년 112억 7,2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541억 3,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
| 보수      | 6,322  | 6,474  | 6,630  | 6,789  | 6,952  | 33,167 |
| 기본경비    | 2,946  | 3,017  | 3,090  | 3,164  | 3,240  | 15,457 |
| 기관부담금   | 828    | 848    | 875    | 903    | 932    | 4,386  |
| 자산취득비   | 411    | -      | -      | -      | -      | 411    |
| 사무실 임차료 | 138    | 138    | 138    | 148    | 148    | 710    |
| 합계      | 10,645 | 10,477 | 10,733 | 11,004 | 11,272 | 54,131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23년도 연구용역보고서(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관한 조직설립, 운영 단가 현황 연구), 63쪽」의 임차청사 1인당 월평균 환산임대료 130.2천원/명을 참고하기로 함

##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진정 조사대상 확대로 82명(국가인권위원회 자료)의 공무원을 증원하고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V. 작성자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행정비용추계과 | 이미연 | 김안나 |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이미연 | 02-6788-4661 | mylee@nabo.go.kr |